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과 중장기 대입제도 전환 방향에 대한 서울 지역 교원의 인식*

김유리** · 배현순*** · 이인수**** · 장나영*****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과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서울 지역 고등학교 교원의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대입 경쟁이 치열하고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서울 지역 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294명의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통계와 함께 보완적으로 Wilcoxon 부호순위검정, 상관분석, 가중 순위점수 및 공동선택 분석,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 참여 교원들은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고교 교육과정 운영과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수능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2028 대입까지는 현 수준 유지와 영향력 변화에 대한 인식이 혼재되어 있었으나, 2032년 이후를 가정한 응답에서는 점진적인 영향력 축소와 자격고사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능과 내신 모두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내신과 수능의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는 부정적 응답이 많았으나, 2032년 이후보다 2039년 이후를 가정한 응답에서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수용도가 높았다. 넷째, 수시·정시 통합과 대입 전형 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다섯째, 대입제도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정책적·제도적 조건은 국가교육과정 개정과 대학 서열화 완화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능의 역할 재정립,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 수시·정시 통합을 포함한 중장기적 대입제도 개선 논의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대학입시제도, 교사 인식, 고교 교육, 중장기 대학입시제도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및 논의

논문접수일: 2026.06.18.

논문수정일: 2026.07.16.

게재확정일: 2026.08.01.

* 본 논문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간한 김유리 외(2025)의 “고교교육과 대입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학입시제도 방안 연구” 보고서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This paper is a revised and supplemented version of content excerpted from the report, “A Study on Future-Oriented College Admissions Systems to Build a Virtuous Cycle Between High School Education and College Admissions,” by Kim et al. (2025), published by the Seoul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 제1저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연구위원 / yuree94@sen.go.kr

*** 공동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 magandang2000@hanmail.net

**** 공동저자, 용화여자고등학교 교감 / smile9061@naver.com

*****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 nayoung0916@gmail.com

I. 서론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변화는 곧 고교 교육과정의 변화와 맞물려 왔으며, 고교-대학 간 연계 구조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핵심 변수로 작용해 왔다. 최근 2025년 고1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이하, 2028 대입 개편안)”이 발표되었다(교육부, 2023). 2028 대입 개편안은 고교학점제를 전제로 한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개편의 주요 사항으로는 먼저, 고교 내신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되며,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성취기준에 따른 준거참조평가(이하 절대평가)와 규준참조평가(이하 상대평가)가 병기된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모든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미적분Ⅱ와 기하를 포함한 심화수학 과목이 수능 과목에서 제외된다.

2028 대입 개편안은 대입 전형의 안정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려는 방향성을 담고 있으나(교육부, 2023), 현행 대입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새로운 쟁점을 추가로 안고 있다. 개편안 발표 이전, 고교 현장에서는 대입제도의 고교학점제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 성취평가제(절대평가)의 전면 도입을 통한 학생 간 서열화 탈피,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및 자격고사화 등을 핵심 과제로 인식해왔다(이명애, 2021; 허정은, 정영희, 박창언, 2020). 그러나 최종 확정된 이번 2028 대입 개편안에 명시된 성취평가(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병기, 수능 선택과목 폐지 등은 교사들이 요구해 온 방향성과 상당 부분 상충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내신의 변별력 약화로 인해 특목고와 자사고에 유리한 불평등한 개편 방안이라는 지적과(김용, 2024), 고교학점제의 운영 원리와 대입제도 간 불일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좋은교사운동 대입정책팀, 2024; 최재훈, 2024).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분석한 김륜희와 김수영(2025)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해당 연구의 분석 결과, 특목고와 자사고의 내신과 수능에서의 우위 가능성, 통합형 수능 체제에 따른 사교육 과열 및 변별력 논란,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간 불일치 등이 주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주제로 도출되었다. 이는 이번 개편안이 교육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2028 대입 개편안을 둘러싼 다양한 우려와 쟁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편안에 대한 고교 현장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고교 교사는 개정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며 진로 및 진학지도를 담당하는 핵심 주체라는 점에서, 새 대입제도에 대한 이들의 인식 및 요구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정책 담론이나 좌담회 및 기고문 형식의 의견(김용, 2024; 좋은교사운동 대입정책팀, 2024; 최재훈, 2024), 소수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오민아, 강태훈, 2025), 2028 개편안의 틀 내에서 대입 전형의 개선안에 대한 연구(임진택 외, 2025)를 통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아울러,

2028 대입 개편안이 확정되어 적용이 시작된 현시점에서는, 단기적인 전형 운영 방안을 넘어 향후 대입제도의 중장기적 개선 방향에 대한 현장의 인식을 파악하는 작업이 함께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 필요성에 바탕해 본 연구는 2028 대입 개편안과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교원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중장기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음 두 개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한 고교 교원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대입제도 전반과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고교 교원의 인식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2028 대입제도 주요 개편 내용 및 쟁점

2028 대입 개편안은 고교학점제를 전제로 한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입시의 핵심 구성 요소인 내신평가 체계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체계를 중심으로 구조적 조정을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고교교육과 대입제도 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2028 대입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모두 나열하기보다, 고교 교육과정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개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2028 대입 개편안은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전면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오민아, 강태훈, 2025).

먼저, 기존의 내신 9등급제는 5등급제로 전환되며, 대부분의 과목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결과가 병기된다. 고교학점제를 전제로 설계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학년도부터는 모든 학년과 과목에 대해 학생의 성취 수준을 A~E의 5단계의 절대평가 결과로 제시한다. 동시에 성취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대학 전형 활용을 위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였다(교육부, 2023). 이는 절대평가 전환에 따른 성적 부풀리기 우려를 완화하고, 대학이 학생의 성취 수준을 일정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다만 일부 교과·과목은 성취도만 기재하고 상대평가 등급과 표준편차를 제공하지 않는 등 예외가 있으며, 과목 개설 유형, 출결 상황, 학적 변동, 정기시험·수행평가 비중, 성취도 분할 점수 등 과목별 평가 정보도 대학에 제공된다.¹⁾ 이러한 정보 제공은 대학이 단순한 등급 외에도 학생이 어떤 교육과정 안에서 어떤 평가

1) 사회·과학 교과의 융합선택과목, 체육·예술·교양 교과군, 과학탐구실험 과목의 경우 성취도만 기재하며, 상대평가 등급과 표준편차는 제공하지 않음. 또한 대학에는 과목 개설 유형, 출결 상황, 학적 변동, 정기시험·수행평가 비중, 수행평가 영역,

경험을 거쳤는지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내신 5등급제와 절대평가·상대평가 병기 방식이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절에서 중요한 쟁점은 내신 등급 체계의 변화 자체보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병기되는 구조가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이라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성취평가제를 도입하더라도 상대평가 등급이 병기될 경우, 대학은 여전히 상대평가 결과를 주요 전형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을 촉진하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성적 산출의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 선택 지도나 교육과정 편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오민아, 강태훈, 2025).

다음으로, 선택형 수능 구조가 개편되어 모든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 출제 체계로 전환되며, 사회·과학탐구 영역 또한 모든 수험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응시하도록 통합 출제된다.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기존과 같이 절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며, 시안 단계에서 논의되었던 심화수학 과목은 수능 출제 범위에서 제외되었다(교육부, 2023).²⁾ 이는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완화하려는 취지를 지니지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중심의 공통 과목 출제가 고교 2~3학년의 일반선택·진로선택 과목 운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김용, 2024). 특히 사회·과학탐구 영역이 고교 1학년 공통과목 중심으로 출제될 경우, 고교 2~3학년의 심화 과목 수업이 입시와 분리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운영상의 쟁점이 존재한다(김용, 2024). 따라서 수능 개편의 핵심 쟁점은 선택과목 유불리 완화라는 정책적 효과와 고교 2~3학년 선택과목 운영의 약화 가능성 사이의 긴장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8 대입 개편안에는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기 위해 서·논술형 평가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중·장기적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서·논술형 평가는 학생이 답을 직접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선택형 문항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등 고차적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변화와 역량 중심 평가의 지향점에 부합하는 유용한 방식이다(김경희, 2020). 이와 같은 개편 방향은 평가 방식의 다양화를 지향하지만, 서·논술형 평가가 대입 전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성취기준에 기반한 평가 요소 설정, 채점 기준의 구체화, 교사 간 공동 검토와 채점 절차,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체계 등 평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김경희, 2020; 신승한, 2025). 즉, 서·논술형 평가는 미래형 평가로서의 가능성을 지니지만, 그 도입 여부와 확대 수준은 평가 신뢰성 확보 장치와 현장 실행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2028 대입 개편안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응하여 내신과 수능의 구조를 조정하고, 선택과목 유불리와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동시에 내신 5등급제와 성취평가

성취도 분할 점수 등 과목별 평가 정보가 함께 제공됨.

2) 심화수학은 수능 과목에서 제외되었으며,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의 진로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병기 방식이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지, 통합형 수능이 고교 2~3학년 선택과목 이수율과 대학 전공 학습을 적절히 연결할 수 있는지, 서·논술형 평가와 정성평가 확대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김용, 2024; 오민아, 강태훈, 2025). 특히 2028 대입 개편안이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 진학지도, 학생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대학별 전형 대비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교원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부담과 혼란을 예상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오민아, 강태훈, 2025). 따라서 본 연구는 2028 대입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토대로, 고교 현장 교원들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고교교육과 대학입시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2. 대입제도에 대한 교원 인식과 개선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향과 수업의 실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해 왔다. 그간 입시제도 개편은 교육 불평등, 공정성 논란 등 사회적 쟁점과 반복적으로 맞물려 추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고교교육과 대학입시 간의 정합성은 주요 핵심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절에서는 먼저 2028 대입 개편안과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을 둘러싼 정책 쟁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교원 인식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분석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대입제도 개편의 정책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에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성취평가제의 신뢰성 확보, 수능의 역할 재정립,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평가의 타당성 제고 등이 대입제도 개선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김기수 외, 2022; 신소영, 2023; 이명애, 2021; 임진택 외, 2025; 허정은 외, 2020).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가 학생의 과목 선택과 교육과정 이수 경험을 왜곡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신소영(2023)도 문헌 분석을 통해 고교학점제에 적합한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으로 전과목 성취평가제 도입과 성취평가제 신뢰도 제고, 수능의 자격고사화, 논·서술형 수능의 점진적 도입, 수시·정시 전형 통합 등을 제안하였다. 이후 발표된 2028 대입 개편안에서는 고교 내신을 5등급제로 완화하고 수능 과목을 통합하여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등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대입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선행연구에서는 특목고 및 자사고의 우위 가능성과 고교학점제와의 정합성 문제 등을 여전히 지적하고 있다(강태중, 2024; 김용, 2024; 오민아, 강태훈, 2025; 임진택 외, 2025).

내신 평가와 관련해서는 성취평가제 확대와 절대평가 전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내신의 절대평가는 내신 성적을 대입 전형에 활용하는 상황에서 학교별 성취수준 분포와 평가 기준이

상이할 경우, 동일한 성취도라 하더라도 대학이 이를 동등하게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김용, 20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것은 학생의 교과목 선택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의 절대평가 수행 능력을 개선하거나 절대평가 교과목에서 학생의 학습 이수 과정과 실제 성취를 변별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 방법을 점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된다(오민아, 강태훈, 2025; 최재훈, 2024). 절대평가 방안에 대해 고영빈과 지은림(2022)은 절대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의 평가 전문성 강화와 표준화된 평가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 지원 체계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내신 절대평가가 단순히 상대평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도입되기보다, 평가 기준의 명료화, 교사 평가 역량 강화, 학교 간 평가 신뢰도 확보 장치와 함께 추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임진택 외(2025)의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부합하는 평가 체계로서 서·논술형 평가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식 암기 중심의 선다형 평가를 넘어 학생의 사고 과정,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논술형 평가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채점 기준의 표준화,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교원 업무 부담 완화, 대학별 활용 방식의 투명성 확보 등 공정성 확보와 업무 부담 완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신승한(2025)은 프랑스의 바칼로레아(Baccalaureat) 사례에서처럼 표준화된 평가 기준과 복수 평가자의 교차 채점 시스템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며, 시범 운영과 부분 도입 및 전면 시행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형 체제와 관련하여서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수능 시행일을 조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나 수시와 정시의 통합이 제안되고 있다(임진택 외, 2025; 좋은교사운동 대입정책팀, 2024). 이러한 논의는 대입제도 개선이 특정 평가방식의 도입 여부에 한정되지 않고, 고교 교육과정 운영, 평가 신뢰도, 전형 일정, 대학의 평가 책무성 등과 맞물린 구조적 과제임을 보여준다.

2)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교원 인식 선행연구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교원 인식 연구는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의 정합성, 수능의 역할, 내신 평가 방식,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평가의 활용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허정은, 정영희, 박창언(2020)의 연구에서는 고교 교사들이 고교학점제에 적합한 대입제도로 선택과목 확대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꼽고 있으며, 이명애(2021)의 연구에서 고교 교사들은 성취평가제의 전면 도입, 수능 전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수능을 최소한의 학력을 인증하는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것이 고교학점제와 가장 정합성이 높은 대입제도 방안으로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 오민아와 강태훈(2025)은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교사들은 내신 5등급제와 통합형 수능 도입으로 인해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이 모두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 정성평가, 면접, 논술 등 대학별 평가 요소가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내신 변별력 약화에 따라 대학이 면접이나 대학별 고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진학지도 부담과 학생의 사교육 의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교사 역시 절대평가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평가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좋은교사운동 대입정책팀(2024)에서 진행한 고교 교사 대상 좌담회에서 교사들은 상대평가 체제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교사의 수업 및 평가 방식을 왜곡시킨다고 분석하며, 진로 적합성에 기반한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고교학점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성적의 유흔리보다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평가 환경이 조성되도록 대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원들은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평가 기준,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와 활용도 제고, 수능의 영향력 조정, 대학별 전형 기준의 투명성 확보,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등을 함께 요구해 왔다(김기수 외, 2022; 이명애, 2021; 최재훈, 2024). 이러한 요구는 대입제도 개선이 평가 방식의 변화나 전형 시기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완성되기는 어렵고, 교사의 평가 전문성, 대학의 평가 책무성, 서열화된 고교 체계 개선 등의 구조적 조건이 함께 구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3)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차별성

종합하면, 대입 정책 쟁점에 관한 선행연구는 2028 대입 개편안과 관련하여 고교교육과 연계한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상대평가 병기와 고교학점제 간 대치 문제, 수능의 역할 재조정 필요성, 절대평가 전환과 이에 필요한 조건 등을 보여준다. 한편 교원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간 정합성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확인하게 해준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대입제도 개선의 당위성이나 거시적 정책 설계에 대한 제언이거나(김용, 2024; 신승한, 2025), 대입제도 전반보다는 전형 개선에 초점을 두거나(임진택, 2025), 소수 대상의 질적 연구나 기고문 형태(오민아, 강태훈, 2025; 좋은교사운동 대입정책팀, 2024; 최재훈, 2024)로 2028 및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보다 폭넓은 교원 집단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기존 연구는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한 단기적 전망을 제시하는 데에는 의의가 있으나, 2028 대입제도뿐 아니라 2032년 이후 대입제도의 중장기적 개선 요구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행 대입제도와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함께 살펴보고, 향후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이 요구하는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28 대입 개편안과 대입제도 개선안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내신 절대평가 전환,

수시·정시 통합, 서·논술형 평가 확대, 수능 역할 재정립 등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연구가 제도 설계의 당위성과 방향성에 주로 집중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교원 인식이라는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한 현장의 기대와 우려, 대입제도 전반의 개선 요구, 2032년 이후 및 2039년 이후 중장기적 대입제도 변화 방향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내용

대입제도에 대한 현장 인식을 파악하고, 2028 대입 개편안의 현장 수용성과 실천적 과제 탐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2028 대입 개편안 및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초안을 마련하였다. 초안 구성 과정에서는 교육부의 2028 대입 개편안, 고교교육 정상화 쟁점, 2032년 및 2039년 미래 전망,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간 정합성 논의를 반영하여 문항 영역을 설정하였다. 이후 전문가 자문(대입제도 및 고교 교육과정 전문성을 지닌 현장 교원 2명, 교육행정가 3명, 입학사정관 2명)을 통해 문항의 적절성, 내용의 명료성, 연구 목적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였다. 전문가 검토는 문항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지, 응답자가 문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선택지가 주요 쟁점을 포괄하는지, 정책적 해석이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2028 대입 개편안의 영향을 고교 교육과정 운영, 고교학점제 운영, 수능 영향력으로 세분화하고, 대입이 추구해야 할 가치, 수시·정시 통합 및 전형 시기 조정, 2032년·2039년 이후 대입과 내신의 변화 방향, 제도 전환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조건 문항을 보완하였다. 이러한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설문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다(<표 1> 참고).

설문 문항은 총 4개 영역(① 2028 대입제도에 대한 인식, ② 현행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③ 2032년·2039년 이후를 염두에 둔 미래형 대입제도에 대한 인식, ④ 제도 전환을 위한 정책·제도적 조건)으로 구분하여 30문항으로 설계하였다. 문항 유형은 선다형과 서술형을 병행하여, 정량적 경향과 함께 현장의 맥락적 인식을 함께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2> 참고). 특히 선다형 문항 중 리커트 척도 문항은 문항의 성격에 따라 1점과 5점의 의미가 다르게 설정되었으므로, 결과표별 주석을 통해 척도 기준과 평균값 해석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순위형 문항은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하였고, 서술형 문항은 자유응답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에서 기획·수행된 바, 현실적인 자료 수집의 접근성을 고려하

〈표 1〉 설문 문항 개발 및 전문가 검토 절차

구분	주요 내용	반영 결과
초안 구성	2028 대입 개편안, 고교교육 정상화 쟁점, 2032년·2039년 미래전망, 대입제도 개선 관련 선행연구 검토	2028 대입제도 인식, 미래형 대입제도, 대입 가치, 정책 조건 중심의 초안 구성
전문가 검토	현장 교원 2명, 교육행정가 3명, 입학사정관 2명이 문항 검토	대입제도, 고교 교육과정, 대학 전형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검토
검토 기준	연구목적 부합성, 내용 적절성, 표현 명료성, 선택지 포괄성, 척도 일관성, 정책적 타당성	문항 배열, 선택지 표현, 응답 형식, 자유응답 문항 수정
주요 수정 내용	2028 대입 영향 문항 세분화, 수시·정시 통합 문항 정리, 2032년·2039년 변화안의 문항 구조 통일, 정책 조건 문항 보완	선다형, 순위형, 서술형을 포함한 최종 문항 체계 확정
최종 문항 체계	4개 영역, 30문항	① 2028 대입제도 인식 ② 대입제도 전반 인식 ③ 미래형 대입제도 인식 ④ 정책적·제도적 조건

〈표 2〉 설문조사 문항 개요

영역(세부영역)		문항 내용	응답 형식
2028 대입제도에 관한 인식		1-1. 2028 대입 개편안이 고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에 끼치는 영향	선다형
		1-2. 2028 대입 개편안이 고교학점제에 끼치는 영향	
		1-3. 2028 대입 개편안에서의 수능 영향력	
		1-4. 2028 이후 대입제도 개편의 필요성	
		1-5. 2028 대입에 관한 추가 의견	서술형
대입제도에 관한 인식		2-1. 대입이 추구해야 할 가치	순위형
		2-2. 대입에서의 수능 영향력	선다형
		2-3. 수시·정시 통합 및 전형 시기 조정	
		2-4. 대입제도에 관한 추가 의견	서술형
미래형 대입제도에 관한 인식	2032 이후 대입과 내신의 변화(안)	3-1.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	선다형
		3-2. 수능을 서·논술형 평가로 전환	
		3-3.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	
		3-4.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	
		3-5.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3-6. 수시·정시 통합 및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종료 후 대입 운영	
		3-7. 내신 비교과 폐지, 교과 정성평가 보완	
		3-8. 대입은 절대평가화된 수능과 내신, 면접을 통해 진행	
		3-9. 서·논술형 수능을 전제할 경우의 시행 방안	
		3-10. 2032 이후 대입과 내신의 변화(안)에 대한 추가 의견	서술형
	2039 이후 대입과 내신의 변화(안)	3-11.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	선다형
		3-12. 수능을 서·논술형 평가로 전환	
		3-13.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	
		3-14.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	
		3-15.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3-16. 수시·정시 통합 및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종료 후 대입 운영	
		3-17. 내신 비교과 폐지, 교과 정성평가 보완	
		3-18. 대입은 절대평가화된 수능과 내신, 면접을 통해 진행	
		3-19. 2039 이후 대입과 내신의 변화(안)에 대한 추가 의견	서술형
정책적·제도적 조건	4-1. 교육 선순환을 위한 초중등 및 대학의 정책·제도 개선	순위형	
	4-2. 정책·제도 개선에 대한 추가 의견	서술형	

주. $N=294$. 선다형 문항 중 리커트 척도 문항은 문항 성격에 따라 1점과 5점의 의미가 다르게 설정되었으므로, 각 결과표의 주석에 척도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였음. 순위형 문항은 응답자가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하는 방식이며, 서술형 문항은 자유응답 방식으로 구성하였음.

여 조사 대상을 대도시(서울) 지역 고등학교 교원으로 한정하였다. 최종 설문은 2025년 6월 9일(월)부터 6월 13일(금)까지 온라인 설문 시스템(서울시교육청 유레카)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서울 지역 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배포된 온라인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원 294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교원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보다, 2028 대입 개편안과 중장기 대입제도 전환 방향에 대한 서울 지역 고등학교 교원의 전반적인 인식 경향과 쟁점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응답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별, 교직 경력, 담당 교과, 학교 유형, 직위, 진학지도 업무 경험 등 개별 배경변인은 별도로 수집하지 않았다. 비록 전국 단위의 표집 대표성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서울 지역은 대입 경쟁이 치열하고 교육 정책 변화에 대한 현장의 민감도가 높은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본 조사는 연구 결과를 전국으로 일반화하기보다는 고교학점제 및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된 서울 지역 설문 참여 교원들의 인식과 개선 요구를 탐색적으로 파악하는 데 의의를 가진다.

다만 응답자의 배경변인을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자 구성이 서울 지역 고등학교 교원 집단을 어느 정도 대표하는지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입제도에 대한 인식은 학교 유형, 담당 교과, 교직 경력, 진학지도 경험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나, 본 연구 자료로는 이러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서울 지역 고등학교 교원 전체의 일반적인 인식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교원들의 탐색적 인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응답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답자 특성별 차이 분석보다는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전반적 인식 경향과 문항 간 응답 구조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기술통계, 대응표본 분석, 상관분석, 가중 순위점수 산출 및 공동선택 문항 분석, 서술형 응답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설문조사 응답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6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먼저 2028 대입 개편안, 대입제도 전반, 2032년 이후 및 2039년 이후 미래형 대입제도 변화안, 정책적·제도적 조건에 대한 응답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고교 교원의 전반적인 인식 경향을 파악하였다.

둘째, 2032년 이후(안)과 2039년 이후(안)에 대한 응답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 응답자가 모두 응답한 8개 세부문항을 대상으로 대응표본 분석을 실시하였다. 리커트 척도 자료의 서열 특성을 고려하여 응답 차의 방향과 순위를 활용하는 비모수 검정인 Wilcoxon 부호순위검정을 주 분석으로 활용하였으며(Siegel & Castellan, 1988), 반복 검정에 따른 제1종 오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Holm-Bonferroni 방식으로 유의확률을 보정하였다(Holm, 1979). 또한 시점별 응답 간 차이의 실제적 크기를 함께 해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순위 기반 효과크기인 r 을 함께 제시하였다(Tomczak & Tomczak, 2014).

셋째, 미래형 대입제도 변화안에 대한 문항 간 응답 상관을 파악하기 위해 2032년 이후(안)과 2039년 이후(안)의 8개 세부문항에 대해 Spearma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능 자격시험화,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및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수시·정시 통합 등 주요 변화안이 응답자 인식 속에서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넷째, 순위형 문항인 대입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제도적 조건에 대해서는 단순 1순위 빈도 외에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을 부여하는 가중 순위점수 방식으로 종합 우선순위를 산출하고, 공동선택 문항을 분석하였다.

넷째, 서술형 응답은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주 분석자가 5개 자유응답 문항을 대상으로 실질적 내용이 없는 응답을 제외한 뒤, 응답 1건을 분석 단위로 하여 코드를 부여하였다. 분석 대상은 2028 대입제도 자유의견, 대입 가치 관련 추가의견, 2032년 변화안 추가의견, 2039년 변화안 추가의견, 정책·제도 조건 관련 추가의견의 5개 문항이며, 실질적 내용이 없는 응답을 제외한 유효 응답은 총 374건이었다. 동일 응답자가 여러 문항에 응답한 경우에도 문항별 응답을 각각 별도의 분석 단위로 보았다. 하나의 응답 안에 복수의 주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중복 코딩을 허용하였다. 다만 동일한 주제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거나 부연한 경우에는 하나의 범주로만 코딩하였다. 이어서 응답 내용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의미 단위를 추출하고, 유사한 의미 단위를 묶어 범주화하였다. 범주는 2028 대입 개편안 및 대입제도 개선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을 기초로 하되, 기존 범주로 포섭되지 않는 반복적 주제는 귀납적으로 추가하여 생성하였다. 이후 의미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범주는 원문 맥락과 핵심어를 기준으로 통합·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연구자 1인이 원자료, 초기 코드, 범주를 교차 검토하였다. 검토 과정에서 코드와 범주 간 적절성, 범주의 중복 여부, 범주와 원자료의 부합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최종 범주를 확정하였다. 이후 도출된 범주가 2028 대입 개편안 및 대입제도 개선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쟁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하였다.

IV. 연구 결과

1. 2028 대입 개편안에 관한 인식

1) 2028 대입 개편안이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한 교원의 인식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2028 대입 개편안이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평균 2.15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의 63.61%(187명)가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2028

대입 개편안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 안정성이나 수업 질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인식보다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란과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 서술형인 추가 의견에서는 상대평가 등급 병기로 인해 수능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약화될 것이라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예: “수능 선택과목 폐지로 인해 2, 3학년 수업 집중도 하락 우려”, “수능 과목이 아니라면 수업을 듣고자 하는 의도가 약함”).

〈표 3〉 2028 대입 개편안에 관한 인식 응답 결과(N=294)

조사항목	강한 부정/감소/불필요(1점)	부정/감소/불필요(2점)	중립/중간/유지(3점)	긍정/증가/필요(4점)	강한 긍정/증가/필요(5점)	평균 (표준편차)
2028 대입 개편안이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	119명 (40.48%)	68명 (23.13%)	58명 (19.73%)	41명 (13.95%)	8명 (2.72%)	2.15 (1.17)
2028 대입 개편안이 고교학점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	118명 (40.14%)	64명 (21.77%)	71명 (24.15%)	34명 (11.56%)	7명 (2.38%)	2.14 (1.14)
2028 대입에서의 수능 영향력	29명 (9.86%)	76명 (25.85%)	63명 (21.43%)	57명 (19.39%)	69명 (23.47%)	3.21 (1.31)
2028 대입 이후 대입제도 개편 필요성	5명 (1.70%)	5명 (1.70%)	18명 (6.12%)	119명 (40.48%)	147명 (50.00%)	4.35 (0.81)

2) 2028 대입 개편안이 고교학점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

2028 대입 개편안이 고교학점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2.14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1.91%(182명)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긍정 응답은 13.94%(41명)에 그쳤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구조가 대입제도 변화와 직접적으로 충돌하거나 긴장 관계에 놓여있다고 인식하는 교원이 다수임을 보여준다. 추가 의견에서도 고교학점제의 핵심 취지인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제도적으로 제약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특히,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는 학생들이 성적 확보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예: “5등급제가 되면서 각 과목별 석차 등급보다 수강자 수, 과목 평균, 성취비율,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훨씬 중요해지니 수강자수 많은 과목으로 몰림”, “선택을 많이 하는 것이 고교학점제 목적인데 그림만 그렇게 그려놓고 실제 운영은 수능 과목 위주가 될 것이다.”).

3) 2028 대입에서의 수능 영향력

2028 대입에서의 수능 영향력에 대해서는 평균 3.21점으로 중립에 가까우나 응답 분산이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42.86%, 126명)은 내신 변별력 하락에 따른 풍선효과에 주목한 반면(예: “내신 등급 개정과 등급 간 조정이 완화된 후 변별력 판단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수능영향력은 증가할 것으로 보임”, “학교생활기록부를 더욱 중시하겠지만 학교별 격차로 수능을 보고자 하는 학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됨”),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35.71%, 105명)은 공통과목 중심 출제에 따른 변별력 저하 가능성을 근거로 들었다(예: “수능 탐구영역도 1학년 과목으로만 제한하여, 대입에서 영향력이 없어질 것임”, “현 수능대로라면 대학 입장에서 학생의 우수성을 판단할 근거가 희박해질 것임”). 이러한 결과는 제도 전환기에 수능의 변별 기능에 대한 현장의 인식이 일관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4) 2028 대입 이후 추가적 대입제도 개편 필요성

2028 대입 이후의 추가적인 대입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균 4.35점으로 매우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응답자의 90.84%(266명)가 개편 필요성을 지지한 반면, 현행 유지는 6.12%(18명), 필요하지 않거나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70%(5명)로 나타나 현행 개편안이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간의 구조적 정합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현장의 문제 인식이 강하게 존재함을 보여준다. 추가적 대입 개편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 추가 의견에서는 보다 분명한 문제의식과 개편 요구가 확인되었다. 먼저, 2028 대입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 비판이 다수 제기되었다. 일부 교원들은 현 개편안이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고교 교육과정 운영과 대입 준비 과정에 새로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예: “퇴행적”, “실패작”, “부작용이 예상되는 제도”).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간의 구조적 불일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교원들은 교육과정이 선택과 다양성 및 학생 주도 학습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대입제도가 여전히 과목 간 불균형과 탐구과목 설계 문제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제약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예: “모든 과목에서 상대평가를 하며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게 하였음”). 다음으로 학교와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강조하는 의견도 다수 나타났는데,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설계보다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예: “대학 학생 선발 자율권 확대가 필요함”). 마지막으로, 일부 교원들은 제도 개편 이전에 사회적 인식과 학교 현장의 수용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대입제도 변화가 제도 설계만으로 정착되기 어렵고, 사회적 공감대, 학교 현장의 실행 여건, 교사의 업무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잦은 제도 변경이 오히려 교육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타났다(예: “문화가 먼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현장 여건과 교사 피로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5) 2028 대입 개편안에 관한 추가 의견

마지막으로, 2028 대입 개편안에 관한 추가 의견을 묻는 서술형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응답내용은 크게 계열 간 형평성, 제도 간 불일치, 평가체계에 대한 불신, 현장 적용의 현실성, 그리고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범주화될 수 있었다. 계열 간 형평성에 대한 의견은 통합 수능이 수학·과학 역량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경우, 인문계열 학생의 학습 동기 저하와 참여 축소를 초래할 것에 대한 우려였다(예: “통합 수능이 자연계열 학생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여 인문

계열 학생의 학습 동기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제도 간 불일치 문제는 고교학점제와 수능·대입 제도 간의 방향성 불일치에 대한 지적으로,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선택과 다양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선택과목 폐지와 대입 중심 운영 구조가 학교 교육과 입시 준비 간의 단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예: “교육과정의 취지와 수능이 전혀 맞지 않음”). 평가체계에 대한 불신은 절대평가 도입 확대, 내신 평가 구조 개선, 성취 중심 평가로의 전환 필요성 등 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로, 현행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혼재 구조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예: “모두 절대평가를 해야 함”). 현장 적용의 현실성은 일반고, 자율형사립고와 달리 특성화고 등 일부 학교 유형에서 교육과정 다양화 자체가 어려워 고교학점제의 실질적 운영이 제한된다는 지적이었다(예: “특성화고 등은 교육과정 다양화 어려워 고교학점제 실질 적용이 어려움”). 마지막으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는 잦은 제도 변경과 현장 의견 반영 부족에 대한 지적으로, 제도 개선의 방향보다는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먼저 확보될 것을 강조하는 의견이 있었다(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입제도가 변경될 경우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음”).

2. 대입제도에 관한 인식

1) 대입이 추구해야 할 가치

대입제도 전반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1순위 응답에서 교원들은 ‘선발의 공정성’(39.12%, 115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선택하였으며, 이는 대입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토대가 공정성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다음으로는 ‘단편적인 성적이 아닌 역량의 평가, 또는 성장 가능성의 평가’가 24.15%(71명)로 나타나, 공정성 다음으로 대입 평가의 질적 전환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2순위 응답에서는 ‘단편적인 성적이 아닌 역량의 평가, 또는 성장 가능성의 평가’(21.09%, 62명)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1순위에서 공정성이라는 기본 전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된 후에, 평가의 내용과 방식이 점수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확장될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다.

<표 4> 대입이 추구해야 할 가치 응답 결과

조사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선발의 공정성	115	39.12	45	15.31	44	14.97
변별	13	4.42	45	15.31	30	10.20
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	53	18.03	54	18.37	58	19.73
단편적인 성적이 아닌 역량의 평가, 또는 성장 가능성의 평가	71	24.15	62	21.09	50	17.01
학생 각자의 경험과 진로 존중	14	4.76	36	12.24	47	15.99
초중고 교육과정 이수 및 성취도 확인	25	8.50	42	14.29	33	11.2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통합	3	1.02	10	3.40	32	10.88
전체	291	98.98	284	96.61	262	89.12

3순위 응답에서는 ‘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19.73%, 58명)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단편적인 성적이 아닌 역량의 평가, 또는 성장 가능성의 평가’(17.01%, 50명)와 ‘학생 각자의 경험과 진로 존중’(15.99%, 4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입제도가 고교 교육과정에서의 다양한 학습 경험과 학생 개별의 진로를 보다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중·하위 순위로 갈수록 점차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한편, 순위형 응답은 1순위 응답만으로는 교원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가치의 전체적 우선순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1순위에 3점, 2순위에 2점, 3순위에 1점의 가중 순위점수를 산출하여 대입제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의 종합 우선순위를 추가로 분석하였다(<표 5> 참고). 그 결과, ‘선발의 공정성’이 47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단편적인 성적이 아닌 역량의 평가 또는 성장 가능성의 평가’가 387점, ‘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이 325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교원들이 대입제도의 기본 전제로 공정성을 가장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점수 중심 선발을 넘어 역량과 성장 가능성, 대학 수학 적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동선택 빈도를 살펴본 결과, ‘선발의 공정성’과 ‘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 ‘선발의 공정성’과 ‘역량·성장 가능성 평가’가 함께 선택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교원들이 공정성과 역량 중심 평가를 상호 대립적인 가치로 보기보다는, 대입제도가 동시에 확보해야 할 복합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5> 대입제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가중 순위점수 분석 결과

순위	대입이 추구해야 할 가치	Top3 포함율	가중 순위점수
1	선발의 공정성	69.4%	479
2	단편적인 성적이 아닌 역량의 평가 또는 성장 가능성의 평가	62.2%	387
3	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	56.1%	325
4	초중고 교육과정 이수 및 성취도 확인	34.0%	192
5	학생 각자의 경험과 진로 존중	33.0%	161
6	변별	29.9%	159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통합	15.3%	61

2)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

대입제도 주요 개선 방안에 대한 교원의 인식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대입에서의 수능 영향력은 평균 2.73점으로 나타나, 현 수준보다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45.58%, 134명)이 증가해야 한다는 응답(27.89%, 82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추가 의견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수능 영향력 확대를 주장한 교원들은 주로 대입제도 전반의 균형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현재 수시모집 비중이 과도하다고 인식하거나, 수능이 학생 개인의 노력과 성취를 비교적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도구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예: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은

모두 의미가 있는 제도이나, 전형 비율의 조정이 필요함. 현재는 수시모집 비중이 과도함”, “노력의 대가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개입되지 않고 정당하게 반영되어야 함”).

다음으로,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현재와 비슷해야 한다는 응답을 선택한 경우, 수능이 대학 수학 가능성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인식하면서도,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비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 방식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조건부 인식을 보였다. 이들은 수능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거나 급격히 축소되는 것 모두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예: “이름처럼 대학수학능력이 가능한지 정도를 판별하는 정도면 된다고 생각함”.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비율은 균형 있게 조정되는 것이 적절함”).

마지막으로, 수능의 영향력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교원들은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와 충돌을 핵심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들은 학생의 과목 선택과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고교학점제 하에서 획일적인 전국 단위 시험인 수능이 중심이 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수능은 대학 진학을 위한 자격시험 또는 기초학력 확인 수준으로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예: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는 대학별 수시모집 강화 필요”. “학생의 기초학력, 기초교육과정 이수 충실도를 확인하는 자격시험 정도로 작용하는 것은 긍정적임”). 특히, 공통 과목 중심의 통합 수능 체제에서는 실질적인 변별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예: “공통 수능으로 학생을 어떻게 변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더불어, 수능 중심 구조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문제의식도 다수 확인되었다(예: “수능은 사교육을 조장하므로, 학교 내신을 충실히 이수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표 6〉 대입제도 주요 개선 방안에 관한 인식

조사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평균(표준편차)
대입에서의 수능 영향력	60명 (20.41%)	74명 (25.17%)	78명 (26.53%)	50명 (17.01%)	32명 (10.88%)	2.73 (1.27)
수·정시 통합 및 전형 시기 조정	13명 (4.42%)	38명 (12.93%)	66명 (22.45%)	101명 (34.35%)	76명 (25.85%)	3.64 (1.13)

주. N=294. 문항별 척도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대입에서의 수능 영향력: 1=크게 축소해야 한다, 2=약간 축소해야 한다, 3=현재와 비슷해야 한다, 4=약간 증가해야 한다, 5=크게 증가해야 한다.
- 수·정시 통합 및 시기 조정: 1=전혀 적합하지 않음, 2=적합하지 않음, 3=보통, 4=적합함, 5=매우 적합함.

3) 수시·정시 통합 및 대입 시기 조정

<표 6>과 같이 수시·정시 통합 및 전형 시기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평균 3.64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60.20%(177명)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파행을 막기 위한 구조적 대안으로서 해당 정책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공감하고 있었다. 반면, 수시·정시 통합 및 대입 제도의 시기 조정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응답은 17.35%(51명), 보통이라는 응답은 22.45%(66명)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추가 의견을 통해 긍정적 인식의 이유를 살펴보면, 교원들은 무엇보다 고교 교육과정 특히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의 정상적 운영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였다. 수시와 정시가 분리된 현행 구조에서는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학생들이 결석하거나 학업에 몰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었다(예: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보다 학원 수강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이에 따라,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통합하고 대입 일정을 조정하여 학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교 수업이 졸업까지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예: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위해서라도 통합이 필요함”). 일부 교원들은 수능 시기를 12월로 조정하고, 이후 1~3차에 걸친 통합형 전형을 운영하는 방식 등 비교적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예: “12월부터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구분하지 않고 1차, 2차, 3차 전형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통합하여 12월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반면, 부정적 인식을 보인 응답자들은 사교육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이 통합될 경우 입시 준비 시점이 앞당겨지거나 경쟁이 한 시기에 집중되어 사교육 의존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예: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음”).

마지막으로, ‘보통’에 응답한 교원들은 통합의 방향성 자체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현재 논의가 구체적 설계 없이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었다. 이들은 명확한 전형 구조, 일정 설계, 평가 방식에 대한 청사진 없이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예: “구체적인 방향성 없이 제도 변경만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3. 미래형 대입제도에 관한 인식

1) 수능 변화에 관한 인식

고교 교육과정의 변화와 향후 학령인구 급감 전망을 고려할 때, 2028 대입 개편안 이후의 대입제도 변화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32년 이후와 2039년 이후를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분석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2032년은 2028 대입 개편안이 한 주기 적용된 이후의 단기 조정 시점으로 볼 수 있으며, 2039년은 2033학년도 이후 단계적 제도 전환이 일정 기간 누적된 뒤 중장기 개편 과제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후속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미래형 대입제도 중 수능 변화에 대한 교원 인식을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먼저, 수능을 초·중등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최소 학업 기준으로서의 자격고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032년 이후($M=3.66$)와 2039년 이후($M=3.74$) 모두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나타났다. 반면 수능의 서·논술형 전환은 두 시기 모두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2032

년 이후: $M=2.40$, 2039년 이후: $M=2.76$). 교원들은 수능의 위상 축소 및 기능 재정립에는 공감하나,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따른 채점 신뢰도 및 현장 부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두 시기 모두에 대해 찬성 의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2032년 이후: $M=3.35$, 2039년 이후: $M=3.52$), 해당 방안이 현장 수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7〉 미래형 대입제도(수능 변화)에 관한 인식

조사항목	시기	1점	2점	3점	4점	5점	평균(표준편차)
수능의 자격시험 전환	2032	37명 (12.59%)	38명 (12.93%)	29명 (9.86%)	75명 (25.51%)	115명 (39.12%)	3.66 (1.42)
	2039	32명 (10.88%)	36명 (12.24%)	30명 (10.20%)	76명 (25.85%)	120명 (40.82%)	3.74 (1.38)
수능의 서·논술형 전환	2032	93명 (31.63%)	86명 (29.25%)	47명 (15.99%)	40명 (13.61%)	28명 (9.52%)	2.40 (1.31)
	2039	74명 (25.17%)	61명 (20.75%)	67명 (22.79%)	47명 (15.99%)	45명 (15.31%)	2.76 (1.39)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2032	46명 (15.65%)	50명 (17.01%)	42명 (14.29%)	67명 (22.79%)	89명 (30.27%)	3.35 (1.45)
	2039	33명 (11.22%)	44명 (14.97%)	49명 (16.67%)	74명 (25.17%)	94명 (31.97%)	3.52 (1.36)

주. $N=294$. 모든 문항의 1~5점 척도 기준: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동의하지 않음, 3=보통, 4=동의함, 5=매우 동의함.

2) 내신 변화에 관한 인식

내신 변화에 대해서는(〈표 8〉 참고), 먼저,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은 2032년 이후($M=3.21$)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지 않았으나(47.28%), 2039년 이후($M=3.39$)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다소 우세해지는 경향을 보였다(52.72%). 이는 내신 평가 방식 변화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나, 장기적으로는 제도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감이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8〉 미래형 대입제도(내신 변화)에 관한 인식

조사항목	시기	1점	2점	3점	4점	5점	평균(표준편차)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2032	47명 (15.99%)	61명 (20.75%)	47명 (15.99%)	60명 (20.41%)	79명 (26.87%)	3.21 (1.45)
	2039	37명 (12.59%)	52명 (17.69%)	50명 (17.01%)	70명 (23.81%)	85명 (28.91%)	3.39 (1.39)
내신 서·논술평가 확대	2032	93명 (31.63%)	86명 (29.25%)	47명 (15.99%)	40명 (13.61%)	28명 (9.52%)	2.40 (1.31)
	2039	45명 (15.31%)	59명 (20.07%)	77명 (26.19%)	67명 (22.79%)	46명 (15.65%)	3.03 (1.29)

주. $N=294$. 모든 문항의 1~5점 척도 기준: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동의하지 않음, 3=보통, 4=동의함, 5=매우 동의함.

한편, 내신 서·논술평가 확대는 2032년 이후에는 긍정 응답의 비율(23.13%)이 부정 응답의 비율(60.88%)보다 낮았으며, 2039년 이후에는 긍정 응답의 비율(38.44%)이 부정 응답의 비율(35.38%)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신의 서·논술평가 확대 역시 2032년 이후($M=2.40$)보다 2039년 이후($M=3.03$)에서 수용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충분한 제도적 지원과 여건이 마련될 경우 내신의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평가로의 전환에 대해 점진적 수용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3) 대입 전반 변화에 관한 인식

대입 전반 변화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9>와 같다. 먼저, 내신 비교과 폐지 및 교과 중심 정성평가 보완³⁾에 대해서는 2032년 이후($M=3.16$)보다 2039년 이후($M=3.29$)에 수용도가 다소 높았으며, 2032년 이후에는 찬성 응답이 45.92%, 반대 응답이 34.02%, 2039년 이후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50.00%, 반대 응답이 31.64%로, 내신 비교과 폐지와 교과 중심 정성평가 강화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교원들 사이에 우려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평가 부담 완화에는 공감하나, 정성평가의 신뢰도 확보, 정성평가로 인한 업무 부담, 대학에서의 실제 활용 방식 등 추가적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9> 미래형 대입제도(대입 전반 변화)에 관한 인식

조사항목	시기	1점	2점	3점	4점	5점	평균(표준편차)
내신 비교과 폐지 및 정성평가 보완	2032	43명 (14.63%)	57명 (19.39%)	59명 (20.07%)	79명 (26.87%)	56명 (19.05%)	3.16 (1.34)
	2039	38명 (12.93%)	55명 (18.71%)	54명 (18.37%)	79명 (26.87%)	68명 (23.13%)	3.29 (1.34)
수시·정시 통합 (고3 2학기 종료 후 대입 운영)	2032	25명 (8.50%)	33명 (11.22%)	45명 (15.31%)	91명 (30.95%)	100명 (34.01%)	3.71 (1.31)
	2039	21명 (7.14%)	33명 (11.22%)	47명 (15.99%)	85명 (28.91%)	108명 (36.73%)	3.77 (1.28)
준거참조 수능/내신/면접 결합	2032	29명 (9.86%)	42명 (14.29%)	57명 (19.39%)	89명 (30.27%)	77명 (26.19%)	3.49 (1.29)
	2039	27명 (9.18%)	34명 (11.56%)	61명 (20.75%)	88명 (29.93%)	84명 (28.57%)	3.57 (1.25)

주. $N=294$. 모든 문항의 1~5점 척도 기준: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동의하지 않음, 3=보통, 4=동의함, 5=매우 동의함.

다음으로, 수시·정시 통합 및 고교 3학년 2학기 종료 후 대입 운영은 두 시기 모두에서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2032년 이후: $M=3.71$, 2039년 이후: $M=3.77$), 두 시기 모두 응답자의 과반이(2032년

3) 본 연구에서 ‘내신 비교과 폐지 및 교과 중심 정성평가 보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영역을 대입 전형에서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 비중을 축소하고, 교과 성취도,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육과정 이수 이력 등 교과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정성평가를 보완하는 방안을 의미함.

이후: 64.96%, 2039년 이후: 65.64%)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 요구가 일관되게 나타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절대평가 기반의 수능과 내신, 면접을 결합한 대입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두 시기 모두에서 긍정적 응답이 우세하였다(2032년 이후: $M=3.49$, 2039년 이후: $M=3.57$). 이를 통해, 미래 대입제도에서는 경쟁을 완화하고 역량 중심의 평가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교원들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2032년 이후(안)과 2039년 이후(안)의 응답 차이 및 응답유형

2032년 이후(안)과 2039년 이후(안)의 8개 세부문항의 동의도에 대한 동일 응답자의 가정적 미래 시점 간 응답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다(<표 10> 참고). 여기서 2032년 이후(안)와 2039년 이후(안)는 동일 응답자가 두 가지 미래 시점을 가정하여 응답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Holm-Bonferroni 보정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수능 서·논술형 전환, 수능 절대평가 전환, 내신 절대평가 표기, 내신 서·논술형 확대, 비교과 반영 폐지 및 질적 평가 보완의 5개 문항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곧바로 정책적으로 큰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평균차와 효과크기를 함께 고려하여 해석하였다. 특히 수능 서·논술형 전환은 2032년 이후를 가정한 응답에서 평균 2.40점, 2039년 이후를 가정한 응답에서 평균 2.75점으로 나타났으며, 효과크기 역시 $r=.72$ 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효과크기 r 의 해석에서 .10은 작은 효과, .30은 중간 효과, .50 이상은 큰 효과로 보는 관례적 기준이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Cohen, 1988; Tomczak & Tomczak, 2014), 수능 서·논술형 전환의 효과크기($r=.72$)는 큰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평균차는 .35점으로, 이는 2039년 이후를 가정한 응답에서 수용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의미이지,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표 10> 2032년 이후(안)과 2039년 이후(안)에 대한 대응표본 분석 결과

세부문항	$M(2032)$	$M(2039)$	평균차	r	p (보정값)
수능 자격고사화	3.66	3.73	0.08	0.27	.109
수능 서·논술형 전환	2.40	2.75	0.35	0.72	<.001***
수능 절대평가 전환	3.35	3.52	0.17	0.42	.004**
내신 절대평가 표기	3.21	3.39	0.17	0.39	.004**
내신 서·논술형 확대	2.92	3.03	0.11	0.29	.040*
수시·정시 통합	3.71	3.77	0.06	0.25	.109
비교과 반영 폐지·질적 평가	3.16	3.29	0.12	0.32	.037*
종합안	3.49	3.57	0.09	0.27	.100

주1.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변화안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2032년 이후(안)과 2039년 이후(안)에 모두 응답한 유효 응답자 수는 294명임. $M(2032)$ 와 $M(2039)$ 는 각각 2032년 이후(안)과 2039년 이후(안)에 대한 응답 평균임. 평균차는 $M(2039)-M(2032)$ 로 산출하였음. r 은 Wilcoxon 부호순위검정에 따른 대응표본 순위 기반 효과크기임. p (보정값)은 반복검정에 따른 제1종 오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Holm-Bonferroni 방식으로 보정한 유의확률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두 가정적 미래 시점에 대한 응답 차이가 유의함을 의미하며, 실제 종단적 인식 변화나 정책적 효과를 의미하지 않음.

주2. *** $p<.001$, ** $p<.01$, * $p<.05$

인식이 실제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였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교원들이 서·논술형 평가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만, 2039년 이후와 같은 장기적 미래 시점을 가정할 경우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수록 수용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수능 자격고사화, 수시·정시 통합, 절대평가 수능·내신·면접을 결합한 종합안은 2039년 이후를 가정한 응답에서 평균값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Holm-Bonferroni 보정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는 해당 방안들에 대한 인식이 2032년 이후를 가정한 응답에서 이미 일정 수준 형성되어, 2039년 이후를 가정한 응답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항 간 상관분석 결과, 2032년 이후(안)와 2039년 이후(안)를 가정한 응답 모두에서 ‘수능 자격고사화’와 ‘수능 절대평가 전환’ 간의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32년 이후(안)에서는 두 문항 간 Spearman 상관계수가 $r=.75$ 로 나타났고, 2039년 이후(안)에서도 $r=.75$ 로 나타나 다른 문항 간 상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이는 두 정책 방향에 대한 응답이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상관은 문항 간 응답 경향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탐색적 결과이므로, 수능 자격고사화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반드시 하나의 정책으로 결합되어야 한다거나, 한 정책에 대한 동의가 다른 정책에 대한 동의를 발생시킨다는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없다. 두 문항은 모두 수능의 변별 기능을 완화하고 수능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방향의 정책 지향을 공유하기 때문에 응답 간 관련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수시·정시 통합’은 다른 문항들과의 상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평가 방식 개편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제도 개편 차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4. 정책적·제도적 조건

미래형 대입제도 안착을 위한 선결 조건 분석 결과(<표 11> 참고), 1순위 응답에서는 ‘대학 서열화 완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이 대입 경쟁에 종속되는 근본 원인을 대학 간 서열 구조에서 찾고 있는 현장의 인식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국가교육과정 개정’과 ‘특목고·자사고·영재학교의 일반고 전환’이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나, 고교 유형 간 격차와 교육과정 운영의 불균형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1순위 응답만으로는 정책 조건의 종합적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을 부여하는 가중 순위점수를 추가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290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 서열화 완화’가 281점, ‘특목고·자사고·영재학교의 일반고 전환’이 244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이 241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교원들이 대입제도 개선을 단일한 평가 방식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교육과정, 대학 서열 구조, 고교 유형 체제, 내신 평가체제의 변화가 함께 맞물려야 하는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동선택 분석에서도 ‘특목고 등 일반고 전환’과 ‘대학 서열화 완화’, ‘국가교육과정 개정’과 ‘대학 서열화 완화’, ‘국가교육과정 개정’과 ‘내신 평가 공정성 확보’가 함께 선택되는 경우가 두드러졌다.

이는 현장 교원들이 고교 단계의 학교 서열화 완화와 대학 서열화 완화, 교육과정 개정과 평가 공정성 확보를 상호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연계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1〉 고교-대입 선순환을 위한 정책·제도적 조건의 가중 순위점수 분석 결과

순위	정책·제도적 조건	Top3 포함율(%)	가중 순위점수
1	국가교육과정 개정	46.6	290
2	대학 서열화 완화	43.2	281
3	특목고·자사고·영재학교의 일반고 전환	37.1	244
4	내신 절대평가 전환	40.1	241
5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보장	38.8	215
6	내신 평가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35.4	203
7	교과성취도·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수이력 등을 포함한 질적 평가 강화	34.0	167
8	서·논술형 내신평가로의 중장기적 전환	24.8	123

5. 서술형 응답을 통해 본 대입제도 개선 요구

서술형 응답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5개 자유응답 문항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2> 참고). 분석 대상은 실질적 내용이 없는 응답을 제외한 총 374건이며, 하나의 응답 안에 여러 주제가 포함된 경우 중복 코딩을 허용하였다. 동일 응답자가 여러 자유응답 문항에 응답한 경우에도 문항별 응답을 각각 별도의 분석 단위로 보았으며, 범주별 응답수는 중복 코딩을 허용한 빈도이다. 분석 결과, 서술형 응답은 수능의 공정성 및 변별력, 고교학점제와의 불일치, 내신 평가 신뢰성 및 등급제 개편, 전인적 역량·다면적 평가 선호, 학생 학습부담 및 공교육 정상화, 수시·정시 통합에 대한 기대와 우려 등으로 범주화되었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범주는 ‘수능의 공정성 및 변별력’으로, 전체 유효 응답의 42.2%에서 관련 내용이 나타났다. 이는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자격고사화, 변별력 약화 또는 공정성 확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입제도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고교학점제와의 불일치’가 23.5%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학생 선택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반면, 공통과목 중심의 수능 체제와 상대평가 병기 방식이 이러한 취지를 제약한다는 현장의 문제의식과 연결된다. ‘내신 평가 신뢰성·등급제 개편 이슈’ 역시 18.4%로 나타나, 절대평가 전환 여부와 별개로 학교 간 평가 기준과 내신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 응답을 살펴보면,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간 불일치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의 취지와 수능이 전혀 맞지 않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수능 영향력과 관련해서는 “공통 수능으로 대체 학생을 어떻게 변별하고 평가한다는 건지 모르겠음”과 같이 변별력 약화를 우려하는 응답과, “학생의 기초학

〈표 12〉 서술형 응답의 질적 내용분석 범주별 빈도

범주	응답수	비중
수능의 공정성 및 변별력	158	42.2%
고교학점제와의 불일치	88	23.5%
내신 평가 신뢰성 · 등급제 개편 이슈	69	18.4%
전인적 역량 · 다면적 평가 선호	50	13.4%
학생 학습부담 및 공교육 정상화	45	12.0%
수시 · 정시 통합에 대한 기대와 우려	44	11.8%
교원 업무부담 및 학교생활기록부 ·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신뢰성 문제	29	7.8%
전형유형 선호	29	7.8%
학교 · 대학 서열화 완화 요구	21	5.6%
서 · 논술형 평가의 부담과 신뢰성	20	5.3%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요구	17	4.5%
사교육 심화 우려	17	4.5%
정책 일관성 · 신뢰 부족	12	3.2%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한 우려	11	2.9%
학령인구 감소 대응 관련 의견	9	2.4%

주. 분석 대상은 5개 자유응답 문항에서 실질적 내용이 없는 응답을 제외한 유효 응답 374건임. 비중은 전체 유효 응답 374건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하나의 응답에 둘 이상의 실질적 주제가 포함된 경우 중복 코딩을 허용하였으므로, 범주별 응답수와 비중의 합은 전체 유효 응답수 및 100%를 초과할 수 있음.

력, 기초교육과정 이수 충실도를 확인하는 자격시험 정도로 작용하는 것은 긍정적임”과 같이 수능의 기능 재정립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이 공존하였다. 내신 평가와 관련해서는 “학교별 내신 편차가 없어지도록 해주세요”와 같이 평가 신뢰성 확보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타났으며, 수시 · 정시 통합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위해서라도 통합이 필요함”이라는 기대와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음”이라는 우려가 함께 제시되었다. 또한 정책 일관성에 대해서는 “자꾸 변하는 대입안으로 현장에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빈번한 변화가 오히려 독이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대입제도 개편이 제도 설계뿐 아니라 현장 수용성과 정책 신뢰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서술형 응답은 양적 응답에서 확인된 대입제도 개편 요구가 단순한 찬반 의견이 아니라, 수능의 역할, 고교학점제와의 정합성, 내신 평가의 신뢰성, 전형 일정, 정책 안정성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2028 대입 개편안과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교원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대입 경쟁이 치열하

고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현장 민감도가 높은 서울 지역 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2028 대입 개편안, 대입제도 전반, 2028년을 넘어 2032년, 2039년 이후의 대입 제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다만 분석 대상은 서울 지역 온라인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고등학교 교원 294명이며, 학교 유형, 담당 교과, 교직 경력, 직위, 진학지도 경험 등 응답자 배경변인을 수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는 서울 지역 고등학교 교원 전체의 대표적 인식이라기보다 설문 참여 교원들에게서 확인된 탐색적 인식 경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선행연구 및 2028 대입 개편안의 정책적 맥락과 연결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는 서울 지역 고등학교 교원의 인식 조사에 기초한 탐색적 연구이므로, 이하의 논의는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확정적 결론이라기보다 현장 교원들의 인식에 근거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설문에 참여한 교원들은 2028 대입 개편안이 고교 교육과정 운영과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원들은 특히, 상대평가 체제가 수능과 직접적 연계가 되지 않는 과목에 대한 학습 동기 저하를 유발하고, 고교학점제와 상충되어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대입 제도의 지향 가치로는 선발의 공정성, 단편적 성적보다는 역량과 성장 가능성의 평가, 대학교육 적격자 선발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중 순위점수 분석에서도 선발의 공정성과 역량·성장 가능성 평가가 높은 우선순위로 나타나, 설문 참여 교원들이 대입제도에서 공정성과 평가의 질적 전환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입제도가 단편적인 선발 도구를 넘어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학생 선택, 진로 연계, 역량 중심 교육과 어떻게 조응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는 본 연구 결과만으로 대입제도의 전면적 개편 방향을 단정한다기보다, 2028 대입 개편안이 고교학점제와 충분히 정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장 차원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수능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2028 대입에서는 현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하기를 원하는 인식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2032년 이후를 가정한 응답에서는 점진적으로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고 자격고사화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교학점제와 정합성이 높은 대입제도 방안으로 수능의 자격고사화 또는 역할 재정립을 제안한 선행연구(신소영, 2023; 이명애, 2021)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본 연구의 대응표본 분석 결과, 2039년 이후를 가정한 응답에서 2032년 이후를 가정한 응답보다 일부 변화안에 대한 동의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교원들이 급격한 제도 전환보다는 장기적·단계적 전환 가능성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용성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대입제도 논의에서는 수능의 기능을 단기간에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식보다, 수능이 어떤 수준의 공통 학업 역량을 확인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떻게 재설계될 수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능과 내신 모두 절대평가로의 전환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나타났으나, 서·논술

형 평가로의 전환에는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다만, 서·논술형 평가 수용도는 2032년 이후를 가정한 응답보다 2039년 이후를 가정한 응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응표본 분석에서도 수능 서·논술형 전환은 두 가정적 미래 시점에 대한 응답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교원들이 서·논술형 평가의 필요성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기보다, 채점 신뢰도, 평가 공정성, 교원 업무 부담, 대학별 활용 방식 등 제도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입에는 신중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교원들은 2039년 이후와 같은 장기적 미래 시점을 가정할 경우 평가 방식의 변화 가능성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단기간 내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행 여건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논술형 평가 확대 논의는 ‘도입 여부’만을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 평가 기준의 표준화, 복수 채점 및 검토 절차, 교사 평가 전문성 지원, 학교 간 평가 신뢰도 확보 등 실행 조건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는 성취평가제와 서·논술형 평가의 확대가 평가 인프라 구축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의 논의와도 연결된다(신승한, 2025).

넷째, 수시·정시 통합과 대입 전형 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수시·정시 통합에 대해 입시 준비 시점이 앞당겨져 경쟁이 한 시기에 집중되어 사교육 의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지만, 다수의 교원들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수시·정시 통합은 다른 문항들과의 상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수능이나 내신의 평가 방식 변화와는 구분되는 독립적인 제도 개선 과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전형 체제 개편 논의에서는 수시와 정시의 단순 통합 여부뿐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 운영, 수능 시행 시기, 대학의 전형 일정, 비학생부 기반 지원자의 보완 경로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원들은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정책적·제도적 조건으로 국가교육과정 개정, 대학 서열화 완화, 특목고·자사고·영재학교의 일반고 전환, 내신 절대평가 전환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1순위 응답에서는 대학 서열화 완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가중 순위점수 분석 결과까지 종합하면 국가교육과정 개정과 대학 서열화 완화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동선택 문항 분석에서는 고교 유형 체제 개편과 대학 서열화 완화가 함께 선택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교원들이 대입제도 개선을 단일한 전형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 평가체제, 고교 유형 구조, 대학 서열 구조가 연결된 복합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대학 서열화 완화나 고교 유형 체제 개선은 본 연구의 조사 결과만으로 실행 필요성이 입증된 정책 처방이라기보다, 설문 참여 교원들이 대입제도 개선의 선결 조건으로 중요하게 인식한 과제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대입제도 개선 논의는 내신·수능·전형 시기 조정이라는 기술적 개편에 그치지보다, 고교 교육과정 운영 여건과 대학의 평가 책임, 학교 간 교육 여건 격차 완화 등의 구조적 조건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과 정책 여건을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술형 응답의 내용분석 결과 역시 이러한 해석을 보완한다. 서술형 응답에서는 수능의 공정성

및 변별력, 고교학점제와의 불일치, 내신 평가 신뢰성·등급제 개편, 수시·정시 통합에 대한 기대와 우려, 정책 일관성 및 신뢰 부족 등이 주요 범주로 나타났다. 이는 교원들이 2028 대입 개편안을 단순히 특정 제도 요소의 변화로 받아들이기보다, 고교학점제 운영, 평가 신뢰도,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대입 정책의 안정성과 연계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는 서울 지역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고등학교 교원들이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해 일정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수능의 역할 재정립, 내신 절대평가 전환, 수시·정시 통합, 교과 중심 정성평가 보완 등 대입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곧바로 특정 대입제도 개편안의 당위성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원 인식이라는 하나의 경험적 근거이며, 향후 정책 제언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행연구, 교육부의 2028 대입 개편 방향,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의 중장기 교육정책 논의, 대학의 전형 운영 자료, 학생·학부모·대학 관계자의 인식 등을 함께 검토하는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서 고교 현장의 인식과 우려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정책 논의가 평가 방식의 변화만이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 평가 신뢰도, 전형 일정, 학교·대학 서열 구조 등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서울 지역 고등학교 교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보다 정확히는 서울 지역 온라인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고등학교 교원 29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국 단위의 보편적 인식이나 서울 지역 고등학교 교원 전체의 인식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응답자의 지역, 고교 유형, 담당 교과, 교직 경력, 직위, 진학지도 경험 등 세부 배경 변수를 수집하지 않았으므로, 집단 간 차이 분석이나 통제변수에 기반한 심층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 표집과 함께 응답자 및 학교 특성 변수를 포함하여 지역별·학교 유형별·교과별 인식 차이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대도시 현장의 구조적 쟁점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므로, 도출된 개선 방향이나 실천 과제 효과성을 직접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향후에는 2028 대입 개편안 적용 이후 실제 고교 교육과정 운영, 학생의 과목 선택, 수능 및 내신 대비 방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대학의 활용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서·논술형 평가, 교과 중심 정성평가, 전형 시기 조정 등은 현장 수용성뿐 아니라 평가 신뢰도, 업무 부담, 사교육 영향, 대학의 선발 안정성 등을 함께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후속 연구가 축적될 때, 본 연구에서 확인된 교원 인식은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논의의 기초 자료로 보다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태중 (2024). ‘2028 대학 입시 제도 개편안’의 본질적인 일탈. **오늘의 교육**, 78, 31-43.
- 고영빈 · 지은림 (2022).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 도입에 따른 진로선택과목 운영 및 이수에 대한 고교생의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2), 1085-1102.
- 교육부 (2023).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교육부 보도자료.
- 김경희 (2020). 서 · 논술형 평가의 평가학적 의미 탐색. **교육평가연구**, 33(4), 839-862.
- 김기수 외 (2022).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 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기본연구 2022-05).
- 김륜희 · 김수영 (2025).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에 관한 뉴스 기사 분석. **교육문제연구**, 38(3), 51-73.
- 김용 (2024). 공정한 대입 제도와 불공정한 교육의 제도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 **대학: 담론과 쟁점**, 1, 58-74.
- 신소영 (2023). 윤석열 정부의 고교학점제와 2028 대입개편 방향. **교육비평**, 51, 78-122.
- 신승한 (2025). 인공지능 시대의 중등교육 및 대입제도 개혁. **청소년문화포럼**, 81, 153-163.
- 오민아 · 강태훈 (2025). 고교 교사 인식 및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한 2028 대입제도 관련 주요 쟁점 분석. **교육연구**, 92, 313-333.
- 이명애 (2021).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생평가 및 대입제도 관련 교사 인식 조사. **교육평가연구**, 34(1), 207-230.
- 임진택 외 (2025).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전형 개선 연구(2024-KHU-01호)』. 경희대학교.
- 좋은교사운동 대입정책팀 (2024). 학교 현장에서 살펴본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좋은교사**, 281, 38-45.
- 최재훈 (2024).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제안. **좋은교사**, 281, 30-37.
- 허정은 · 정영희 · 박창언 (2020). 교사의 고교학점제 및 대입제도에 대한 인식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4), 1433-1452.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olm, S. (1979). A simple sequentially rejective multiple test procedure. *Scandinavian Journal of Statistics*, 6(2), 65-70.
- Siegel, S., & Castellan, N. J. (1988). *Nonparametric statistic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McGraw-Hill.
- Tomczak, M., & Tomczak, E. (2014). The need to report effect size estimates revisited: An overview of some recommended measures of effect size. *Trends in Sport Sciences*, 21(1), 19-25.

Abstract

Seoul Teachers' Perceptions of the 2028 College Admission Reform and the Mid-to-Long-Term Transition Directions of the Admission System

Kim, Yuree¹ · Bae, Hyunsoon² · Lee, In Su³ · Jang, Nayoung⁴

¹*Research Fellow, Seoul Educational Policy Institute*

²*Adjunct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³*Vice Principal, Yonghwa Girls' High School*

⁴*Lecture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high school teachers in Seoul regarding their perceptions of the 2028 College Admission Reform Plan and the improvement of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with the aim of deriving policy implications for mid- to long-term reform discussions. To achieve this objective,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high school teachers in Seoul—a region characterized by intense college admission competition and high sensitivity to educational policy changes—and 294 response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long with supplementary analyses including the Wilcoxon signed-rank test, correlation analysis, weighted ranking scores, co-selection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surveyed teachers perceived that the 2028 College Admission Reform Plan would generall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operation of the high school curriculum and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Second, regarding the influence of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perceptions were mixed between maintaining its current level of influence and changing its role until the 2028 admission cycle, but in responses assuming the period after 2032, teachers tended to agree with gradually reducing the influence of the CSAT and transforming it into a qualification exam. Third,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respondents showed a tendency to support the transition of both the CSAT and school-based assessment to an absolute grading system. Also, while negative responses were prevalent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descriptive and essay-type assessments in both the CSAT and school-based assessment, acceptance of such assessments was higher in responses assuming the period after 2039 than in those assuming the period after 2032. Fourth, positive reception was observed regarding the integration of early and regular admission tracks and the adjustment of admission schedules. Fifth,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and the mitigation of university hierarchy were identified as important policy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for improving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suggests the need for mid- to long-term discussions on redefining the role of the CSAT, transitioning the CSAT and school-based assessment toward absolute grading, establishing institutional conditions for expanding descriptive and essay-type assessments, and integrating early and regular admission tracks.

Key Words: 2028 College Admissions Reform Plan, College Admission System, Teacher Perceptions, High School Education, Mid-to Long-term College Admission System